

Barun ICT ¹ January ^{KOR} newslette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 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BARUN ICT Events

Happy New Year!

제6회 Asia Privacy Bridge Forum 개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지난 12월 11일(화) 연세·삼성학술정보관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제6회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 이하 APB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Interoperable Privacy Policies and Principles’을 주제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바레인의 해외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내 정부기관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가 간 정보 요청 및 협력을 위한 양식 (Cross-border Information Request/Collaboration Toolkit)’에 합의하고 서명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로 되는 국가간 협력과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어진 세션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PB Forum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학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국제협력 공동체로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Interoperable Privacy Policies and Principles’

▶ Opening and Welcome Addresses

개회사

이번 가을로 6회째를 맞는 APB Forum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과 청중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Cross-border Information Request/Collaboration Toolkit’에 대한 합의 및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번의 행사를 거치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가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가 아시아 각국이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지속될 APB Forum이 아시아 각국의 정부 및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교(Bridge)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범수 소장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환영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우리의 삶과 행복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에 대해 돌아보고 자성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자칫 상충될 수 있는 개개인의 행복과 공적 측면의 국가 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빅데이터 등의 발전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부작용 역시 양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Facebook, Amazon 등에서 발생한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앞서의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른ICT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격차, 프라이버시 등 우리가 지금 당장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반드시 다뤄질 필요가 있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최되고 있는 APB Forum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바른ICT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금번 행사가 앞서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해결하기 위한 모멘텀이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와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동준 부총장
연세대학교

축사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세계는 전통적인 국경이 의미가 없는 초연결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수집과 동시에 세계 여러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발생한 Facebook 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관련 국가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조사할 수 있었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된 국가들의 공동 대응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현철 본부장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 세션1. Asia Privacy Policies in Digital Economy Era



Francis Euston Acero
National Privacy
Commission

[필리핀] Data Privacy and Protection

필리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PC: National Privacy Commission)는 “The Data Privacy Act”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중요한 것은 이 법령의 법제화 자체보다는 법령을 시행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능력과 행동이 중요하다. 우선, Regulator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1)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2) 적절한 자금력과 (3)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4) 각 섹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Regulator는 이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반대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상반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령을 시행하는 총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적절한 자금 동원력과 모든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총책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5가지의 중요한 과정으로는 (1) 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임명, (2)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를 시행, (3) 프라이버시 관리 정책을 제정, (4) 조직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이행, (5) 관련 리포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다.

[태국] Status of 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글로벌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는 지리적 국경의 제한된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편의를 제공받고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정보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다 쉽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확대된 활용범위 이상으로 많은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규범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Data Subject의 정보들이 Data Controller 와 Data Processor 들에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활용범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어떻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Data Controller가 Data Subject에게 어떠한 자연이나 거짓없이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하고 관련된 규범들이 예외없이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Wanawit Ahkuputra
Ministry of Digital
Economy & Society



Man Yip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싱가포르] Dealing with Personal Data Breaches : The Singapore Approach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데이터(또는 정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기업 입장에서 정보수집, 활용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디지털 세계에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의 정보유출 관리를 살펴보면, 우선 국제적 차원에서는 정보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APEC의 국경간 개인정보보호협약에 등록된 참여자이면서 세계 개인정보보호협약의 회원으로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012에 기반하여 외국의 규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국내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012의 섹션50에 따라 PDPC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는다. 또한, 올해에는 사이버보안법 2018을 제정했는데, 이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포괄

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정보유출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PDPC에서는 의무보고 체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 기준은 정보유출이 고객에게 해롭거나 그 영향력이 큰 경우 또는 유출의 규모가 큰 경우이다. 그 이유는 PDPC가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2018년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큰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약 150만명이 그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건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기意識을 더욱 고취시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바레인] Data Privacy-Trends and Challenges in GCC



Abubakar Arsha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사회가 점점 고도화 되고 정보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Data Privacy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을 식별하는데 있어 가능한 많은 Data point 들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추세는 전통적인 데이터를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로 분류한다. 셋째, 모든 정보는 동등하지 않으며 그 파급효과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보를 계층화 함으로써 구별 될 수 있다. 넷째, 규제 당국이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조직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코드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Regulator가 개인정보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Regulator는 3가지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Data Subject, 이를 수집하는 Data Controller, 마지막으로 Data Controller로부터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Data Processor를 들 수 있다. 즉, Data Controller는 Data Subject가 이득을 취하는 대신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Data Processor에게 처리를 맡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정보보안 문제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를 블록체인과 연결시켜 앞서 언급한 계층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International Data Protection Now and Next



Sooyeoun Jeong
KISA

2018년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이 개최된 의미 있는 한 해이자 정보보호 분야에서 EU의 GDPR이 시행된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다. EU의 GDPR은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2018년 8월에 첫번째 데이터 보호 법안을 제정하였고, 인도와 필리핀 또한 2018년 중반에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한국의 법안에 대해 다수의 언론들은 GDPR이 페널티 폭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GDPR에 대한 이해없이 위기 의식만 강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경향이 있다.

KISA는 GDPR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고 GDPR 가이드북을 작성하여 제공해 왔다. 이러한 워크샵에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등의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GDPR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더불어 기업체들과 정부조직, 그리고 다양한 정부부처들과 협력하여 GDPR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EU와 비디오 컨퍼런스, 오프라인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온라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법안인 네트워크 법 측면에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EU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Panel Discussion



세션 발표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규정’,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에서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청중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에서 방문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과 네이버, 넥슨, 이베이 코리아 등 산업 현장의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GDPR 환경 하에서의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가간 정보보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 이후 진행된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향후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유출통지 제도가 시행됐을 때 DPO (Data Protection Officer)가 수행해야 할 역할, GDPR 환경 하에서 국내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각각에 대한 국내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 소장은 맺음말을 통해 APB Forum이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이슈를 환기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향후 유관 전문가는 물론 일반 개개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 세션2. Data Portability and Data Economy: Ideality and Reality

[한국] 데이터 이동의 이상과 현실



이진화 보안정책실장
넥슨

게임을 하는 동안 내 정보가 이동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보통 게임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는 크게 규제(Regulation), 계정 정보(Account Information), 게임 정보(Game Information)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계정 정보와 관련하여, 게임사에서 이메일 계정이나 SNS 계정을 요구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게임 정보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게임 내 아이템(in-game items)의 경우,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역시 다반사이다. 계정 정보나 게임 정보를 제어하거나 이동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얼마나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이러한 데이터 이동(Data portability)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개인정보 전송의 주체와 확장 제한성 여부, (2) 전송한 데이터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이나 아이템 표준화 혹은 이를 허락하는 시스템이나 공공의 속성, (3) 데이터 이동 권리를 얻은 사업 주체가 스스로 제어하거나 권한을 설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부분에 대한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데이터 이동 정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한국] 한국 생태계에서의 데이터 이동의 이상과 현실



이진규 이사
네이버

사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이동에 대한 걱정 한 가지를 제시해본다. 만약, “나의 데이터 다운로드”라는 것이 데이터 이동을 이끄는 방법으로서 허락이 된다면, 이것은 사생활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잔여 데이터가 잘못 사용되거나 혹은 데이터 쓰레기 장소를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은 결국 포털 서비스의 검색 엔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비용과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검색 결과의 등급을 분류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 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이동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하는 각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데이터 이동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데이터 이동과 소비자 데이터 주권



윤수영 팀장
이베이 코리아

소비자 데이터 주권이란, 데이터 주체인 소비자의 배타적인 권리이며, 이 권리는 데이터를 생성/저장/순환/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과 동시에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포털 혹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 전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에 따라 자동 혹은 수동의 데이터 전송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다만 데이터 이동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음의 4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데이터 선택의 제한이 시장의 기존 장벽이나 기술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 자치권이 손실되는 부분과 그 양을 식별하기 어렵다. 셋째, 데이터 제어가 줄어들고 있다 (데이터의 과도한 복제 등으로 인한 제어력 손실). 넷째, 소비자 배제로 인한 퇴보(소비자 스스로 사생활 침범을 경시하는 것 등)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GDPR 데이터 이동 정책을 차용하는데 있어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으며, 데이터 활용/전송을 위한 생태계 구축과 기술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 🌐

제50차 APPA 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포럼 뉴질랜드 개최



2006년부터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프라이버시 홍보주간을 각 국에서 5월중 1주일씩 진행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그 동안의 사업 성과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APB Forum의 그간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서울 방문과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 더불어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전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분석, AI 등 최근 정보기술의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행사 진행과정에서 호주는 테러방지를 위한 통신법 개정이 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정보기관 협력)에 의한 조직적인 민간인 및 정부 감찰의 위험성을 더 확대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짐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GDPR 시행에 즈음하여 역내 기업 등의 지원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뉴질랜드 공공기구에서는 자국법이 아닌 해외의 법제도를 기업 및 국민에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자신들의 역할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설명하였다.

행사 진행과정에서 호주는 테러방지를 위한 통신법 개정이 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정보기관 협력)에 의한 조직적인 민간인 및 정부 감찰의 위험성을 더 확대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짐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GDPR 시행에 즈음하여 역내 기업 등의 지원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뉴질랜드 공공기구에서는 자국법이 아닌 해외의 법제도를 기업 및 국민에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자신들의 역할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설명하였다.

이번 포럼은 그 동안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 및 주정부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시아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험을 독일,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정보보호기구 대표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APPA는 1992년부터 매년 두차례씩 회의를 하는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들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의 모임이다. 🌐

바른ICT연구소 2018년 M클린 정보문화윤리대상 수상



2018 M클린 정보문화윤리대상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수상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지난 1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매일경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한 '2018년 M클린 정보문화윤리대상' 시상식에서 스마트폰과의존 예방 부문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매경 M클린 캠페인은 매경미디어그룹이 민관 합동으로 2005년부터 13년째 이어온 인터넷·모바일 정화운동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됐으며, 매년 말 우수 종사자와 기관을 선정해 시상해 왔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2015년 12월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2016년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의 출범 이후 줄곧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18년에는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가 영유아

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가이드 및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영유아 디지털 과의존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 밖에 만 12개월 이상~6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성인 602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신문, TV 등 언론보도를 통해 공유 및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

Global Forum on Digital Security for Prosperity 개최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식 개선과 국제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번영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보안 포럼 (Global Forum on Digital Security for Prosperity)’이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12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개최됐다. OECD SPDE (Security and Privacy in the Digital Economy) 부의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바른 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14일 행사에 참석하여 ‘보안 취약점의 책임있는 공유’세션의 좌장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저명인사인 브루스 쉬나이어(미국), 유럽의회 마리체 샤크 의원, 로돌프 하란드(멕시코), 세드릭 로항(프랑스), 로렌조 푸 필로(이탈리아) 등과 함께 60분 간의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수 소장은 IT회사에서 정보보호 취약점을 발견한 후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가 아직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으로서 취약점을 공유함으로써 보안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고려사항, 프레임워크, 제도적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참석인사 중 한 명인 브루스는 각 국가에서 전략적 목적으로 취약점을 숨기는 경우가 있으나, 민간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의 적극적 공유를 통한 취약점의 보완의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의 주요 인물로 선정된 마리체 의원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최근 EU의 회에서 본인이 발의한 사이버 규범(Norms), 유럽공동체 사이버보안법(EU Cybersecurity Act)을 설명하고, 투명성, 정부정보보호활동의 견제 및 감독 등의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세드릭은 해커나 국가에서 취약점을 더 개발하여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는 현실과 ‘취약성 정보 시장(market for vulnerability)’의 선순환 정책의 필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 포럼은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이 경합을 벌인 끝에 내년엔 영국 런던에서 ‘디지털 보안기업 창업 및 지원제도’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대한민국 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성을 다양한 국가들과 공유하고 정보보호 관련 기업들의 수출 증대와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OECD 디지털보안포럼의 한국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바른ICT연구소 소장 김범수 교수: 2019년 OECD 정보보호 부의장 선출 및 4년차 연임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보호작업반(SPDE, Working Party on Security and Privacy in the Digital Economy) 회의에서 김범수 소장 (바른 ICT연구소)이 2019년도 정보보호 부의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김범수 교수가 OECD 34개 회원국의 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정책 이슈를 조정하는 정보보호 부의장으로 연임됨에 따라, ‘바른ICT연구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국제 정보보호 제도와 정책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

Congratulations

제6차 OECD 통계·지식·정책 세계포럼: 미래의 웰빙



작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차 OECD 통계·지식·정책 세계포럼’이 개최됐다.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OECD세계포럼은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GDP(국내총생산)가 진정한 사회발전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발전 지표의 개발을 목표로 2004년 창설되었다. 이번 제6차 포럼의 주제는 ‘미래 웰빙의 탐구와 측정’으로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음의 세 가지 트렌드가 주로 논의되었다. 첫째, 디지털화와 웰빙이다. 디지털 경제의 기술, 스마트 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혁신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불평등이나 고용 및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다루었다. ‘완전한 연결: 과부하 시대의 생존과 번영’의 저자이자 영국 런던 카스 경영대학원 줄리아 홉스봄(Julia Hobsbawm) 명예 객원 교수는 ‘디지털화의 전망과 적응’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세상이 디지털로 전환될 수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 보다는 실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보 과부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사회건강(Social Health)’ 개념을 제시하며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복잡한 세상에서의 거버넌스다. 인터넷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념적으로는 분열된 복잡한 세상에서 향후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웰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와 사회 간 신뢰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공공 윤리 회복, 제도 강화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문 회의로 진행된 ‘디지털 거버넌스와 시민을 위한 기술’ 세션에서도 비정부 기관 및 근거(data)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셋째, 기업의 역할과 웰빙이다.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정책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분야 리더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웰빙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접근법이 논의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의 대담에서 볼보그룹 이사 말린 리파(Malin Ripa)는 “일터에서 개인의 웰빙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웰빙을 위한 기업의 태도와 역할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더불어 부문 회의로 진행된 ‘한국인의 삶의 질 측정: 지표와 정책 활용’ 세션에서는 2009년 OECD세계포럼 이후 지속된 한국인의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소개되었다. 또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한국인의 삶의 질(행복감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개발된 삶의 질 지표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정부관계자의 언급도 있었다. 



10명 중 6명 “가짜뉴스 봤다”...주요 출처 ‘유튜브’

MBC 2018. 11. 23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성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6%가 가짜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고, 60.6%는 가짜뉴스를 실제로 봤다고 응답했다. 가짜뉴스의 출처로는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포털사이트 등이 다음 순으로 조사됐다. 동영상 사이트는 특히 가짜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부정적 인식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짜뉴스가 효과적으로 확산되는 주요 매체로 나타났다.



- 출처 : [1]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949383_22606.html
-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30932001&code=9401
- [3]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key=201811231122436883
- [4]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D4S21XM>
- [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807213413287>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제6회 Asia Privacy Bridge Forum, Fall 2018’ 개최

조선일보 2018.12.13



이번 가을로 6회째를 맞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Asia Privacy Bridge Forum’이 연세대 연세삼성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12월 11일(화)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Interoperable Privacy Policies and Principles’을 주제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바레인 등에서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실행 가능한 국제적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협력과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 합의문 ‘국가 간 정보 요청 및 협력을 위한 양식 (Cross-border Information Request/Collaboration Toolkit)’에 서명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 세션에서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변화 및 개선 방안,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 및 국제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Asia Privacy Bridge Forum(이하 APB Forum)을 2016년부터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을 초청, 아시아 국가들 간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출처 : [1] http://news.chosun.com/pan/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2274.html
- [2]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1/2018121103246.html

[정보문화윤리대상 시상식] ‘M클린 드림팀’ 깨끗한 인터넷 만들어요

매일경제 2018.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매일경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한 ‘2018 M클린 정보문화윤리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1일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바람직한 인터넷·모바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국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내용을 인정받아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 출처 : [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736991>
- [2]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708271

태도로서의 신뢰, 행동으로서의 신뢰

Kim, B. (2018). Relation between attitudinal trust and behavioral trust: An exploratory study.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26, 39-54.

김보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도용, 프라이버시 침해,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처럼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이러한 초불확실성의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신뢰는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설문으로 측정된 신뢰 태도는 실제 신뢰 행동을 예측하는 데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보라 연구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태도 측정 도구와 행동 측정 도구에서 다루는 ‘신뢰’ 구성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 게임과 시나리오 실험을 통해 태도로서의 신뢰와 행동으로서의 신뢰가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소위 신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실험 방법은 물질주의적 신뢰(materialistic trust)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신뢰 성향보다 오히려 개인의 자원 분배나 물질주의적 가치 성향이 더 예측력이 높을 수 있다. 실제 해당 논문의 실험연구를 통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인 온라인 게임(그러나 플레이어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더 높은 점수 획득이 가능)과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신뢰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인의 물질주의적 선호도가 온라인 게임에서의 수행과는 연관이 있으나 사회적 신뢰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신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으로 실제 측정했던 개념은 협소한 의미의 신뢰 행동 즉, 경제적 신뢰 행동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상황에서는 전체 실험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인 신뢰 혹은 불신 행동을 보였으나 사회적 신뢰를 묻는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점 역시 흥미로운 결과이다. 사회적 맥락이 극단적 행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 사회적, 상호적, 인간 중심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적 신뢰 태도 설문을 수정하여 사회적 맥락을 경제적 맥락으로 바꿔서 활용하거나 (2) 개인의 거래적, 경제적, 물질주의적 성향을 알아보는 구체적인 신뢰 태도 설문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의 신통상전략: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국제통상학회/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주최 추계 정책세미나/학술대회
 세션 발표: 국가혁신체제의 군집분석과 경제성장: 미국 특허를 이용한 실증분석



이종호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경제성장에서 기술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슘페테리안 학파의 연구자들은 기술을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초에는 Lundvall, Nelson 등을 위시한 학자들은 국가혁신체제를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Lundvall은 국가혁신체제를 “한 경제 내에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생산, 확산과 이용 속에서 서로 교류하는 요소들과 그들 간의 관계”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국가혁신체제는 지식의 생산, 확산, 이용의 효율성과 연관된 기술적 개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 흐름을 따라, 미국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국가혁신체제를 수량화하고, 한국 및 대만 같이 ICT 기술에 집중하여 고소득 국가를 추격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이 기존 국가들과 대비되는 국가혁신체제를 가졌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먼저 텍스트마이닝을 통하여 미국특허문서로부터 정보들을 추출하여 특허 빅데이터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국가혁신체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수로 기술의 현지화, 기술의 창의성, 기술의 집중도, 기술의 다각화, 그리고 기술의 수명주기를 측정한다. 그리고 위계적 군집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혁신체제를 구별하고 각 혁신체제가 가진 특성을 고찰한다. 2010-17년의 평균적 국가혁신체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22개 국가를 분석한다: 서유럽(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남아메리카(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동아시아(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기타 아시아(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과 일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별도의 집단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20개국은 선진국형, 추격형, 중진국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진국형의 특징은 기술의 집중도가 가장 낮으며 현지화, 다각화, 창의성, 기술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격형은 기술수명주기가 가장 짧고, 다각화와 현지화, 집중도는 높고 창의성은 낮게 나타난다. 반면, 중진국형은 기술수명주기와 창의성은 선진국과 비슷하나, 현지화 및 다각화는 매우 낮으며 집중도는 매우 높았다. 혼합형은 선진국형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그 수준은 다소 낮았다. 선진국형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하며, 추격형은 한국, 대만, 중국, 스웨덴을 포함한다. 반면에 중진국형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의 남미 국가들과 말레이시아, 태국을 포함한다. 혼합형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싱가포르, 인도, 홍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LSDV 패널 분석을 수행하면, 추격형 국가혁신체제를 가진 국가들에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계열 군집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한국, 대만 및 중국 등이 분석 초기에는 브라질,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그룹에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격형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별도의 그룹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ICT 기술 중심의 추격형 국가혁신체제를 가진 한국, 대만 및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진국형 국가혁신체제를 가진 브라질,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은 여전히 소득향상 없이 정체된 것을 국가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중진국 국가들이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긴 수명주기 기술 중심의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를 따라가기보다는 한국, 대만 및 중국 등과 같이 신규 진입과 기술의 현지화가 가능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ICT 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석 결과는 한국 및 대만 같이 후발국의 추격을 받는 국가들도 더 높은 수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선도하고 있는 기술 분야로 진입하여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물인터넷, 디지털 포렌식의 새로운 길을 열다!

김지수

연세대학교 UIC (CTM) 창의기술경영학과



디지털 포렌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내용은 아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태블릿 PC의 파일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높아진 바 있다. 나아가 우리 삶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기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의 영역은 사물인터넷까지 확대되고 있다[1]. 그렇다면 IoT 포렌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IoT 포렌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IoT 기기인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폰, AI 스피커 등의 기기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범죄 사건 등의 증거를 찾아내고 수사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2]. 물론 IoT 포렌식 역시 디지털 포렌식의 한 분야로써, 포렌식의 기본 원칙인 보존, 추적, 문서화, 및 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3]. 하지만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들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특징들과 요구사항을 모두 적용시킬 수가 없다.

예를 들어, Io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데이터 휘발성이 증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디지털 증거로서 IoT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채택한다고 해도 증거 확보 이후에 변경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관리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IoT로부터 나온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물리적으로 손상된 기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3].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KT 화재로 인해 일대의 통신이 마비되어 많은 불편이 야기된 경우가 있었는데, IoT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상황은 IoT 포렌식에 더 큰 장애물로 자리할 것이다. 앞서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IoT 포렌식은 많은 가능성 역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

끄지의 피살 사건의 의혹이 ‘애플 위치’가 녹음한 사건 정황의 정보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IoT 포렌식의 잠재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4]. 하지만 그와 동시에 IoT 포렌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IoT 포렌식은 IoT 기기 사용자의 협조 여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3],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IoT 기기를 디지털 증거로 채택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수사를 위한 노력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의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었을 때 시민들의 협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IoT 포렌식을 활용하는 것은 고무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증거를 합법적이고 바르게 수집하기 위한 법적 절차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불필요한 일로 침해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1] 정영일. (2018, November 20). [이슈분석]디지털 포렌식, PC·스마트폰 넘어 IoT 기기로 확대 - 전자신문. Etnews. Retrieved from <http://www.etnews.com/20181120000088>
[2] 안진우. (2018, September 5). 빅데이터 시대, 전자증거의 확보와 디지털포렌식. 법률신문 오피니언. Retrieved from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6286>
[3] Nieto, A., Rios, R., & Lopez, J. (2018). IoT-forensics meets privacy: Towards cooperative digital investigations. Sensors (Switzerland), 18(2). <https://doi.org/10.3390/s18020492>
[4] 홍하나. (2018, November 1). 치명적인 증거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이젠 IoT·AI스피커로 확장. 디지털데일리. Retrieved from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4324>

카풀의 미래가 곧 공유경제의 미래...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

나유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근 택시 기사들의 분신자살과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 등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카카오가 카풀앱 정식 서비스 출시를 잠정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와 혁신과의 싸움에서 규제 쪽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다.

카풀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시 모델이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나눠쓰기’인 셈인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 형태이다[1]. 미국 카풀 기업 ‘우버’가 한국에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 것은 지난 2013년이지만 한국에서는 약 6년이 지난 현재에도 관련 서비스 준비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카카오를 비롯한 카풀 서비스 제공을 시도했던 다른 업체들 역시 그 동안 택시업계의 반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왔다[2].

택시 업계의 반발은 국내 시장의 생존권 보호라는 입장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그간 택시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의 불편함을 토로하며 새로운 산업의 도입을 기다리는 숫자도 적지 않다.

오히려 카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택시 산업을 더욱 위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승차공유(라이드쉐어링) 산업이 규제의 벽에 막혀 주춤하는 사이, 급격히 성장한 해외의 거대 승차공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승차공유 산업에서는 교통 경로 최적화와 자율주행 등의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에서는 규제에 가로막혀 유관 기술의 개발은 물론 관련

일자리 창출도 여의치 않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

따라서 카풀 관련 논의의 핵심은 규제와 혁신 간의 힘겨루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공생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카풀을 도입하면서 우려되는 택시 산업의 축소는 택시 산업 자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택시 이용자들이 꾸준히 지적해 왔던 승차거부, 승객협박 등의 문제가 먼저 개선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막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또한 카풀 산업의 도입에 따른 택시 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에서 기존 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택시 기사들도 카풀앱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전환이 이 같은 정책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4].

날로 고도화 되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발전 혹은 혁신으로의 흐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기만 늦춰질 뿐, 전세계가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출처: [1]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공유경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206&cid=43667&categoryId=43667>
 [2] [TF초점] 들썩이는 카풀업계...카카오 행보에 '일회일비', 더팩트, <http://news.tf.co.kr/read/economy/1740496.htm>
 [3] [임정욱의 스타트업 스토리]허용이나 규제냐...옴짝달싹 못하는 한국 스타트업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742907>
 [4] 강갑생, [이슈점검] 카풀 갈등에...택시기사 월급도 세금으로 준다는 당정,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216861>



브라질 가짜 뉴스의 영향

Luca Pimenta MEDEIROS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가짜 뉴스는 독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가짜 뉴스를 통해 의도적으로 특정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SNS 상에서 유저들의 클릭을 유도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가짜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모든 정보를 신뢰하게 MIT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약 70%나 빠르게 퍼진다고 한다. 어떤 증거도 없이 이러한 소문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로 입 소문을 타는 것이다.

Statista에서 12개국의 뉴스 신뢰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발표한 가짜 뉴스 노출 정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3위로서 약 35%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비한 뉴스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미국은 31%로 4위, 한국은 30%로 5위에 올랐다. 브라질에서는 특히 최근 진행된 선거 기간 동안 가짜 뉴스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새로 선출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 뉴스나 상대당을 폄하하기 위해 사용된 가짜 뉴스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은 많은 브라질 사람들로 하여금 조작된 정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사건의 수사 결과, 한 유명한 메신저 앱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 국제번호로 그룹을 만들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자동으로 퍼뜨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가짜 뉴스 문제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일 수백만 개의 뉴스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개개인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ICT분야에서 가짜 뉴스 주제를 다루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실과 허구를 구별하고, 가짜 뉴스가 퍼지는 사회 현상을 반성하고, 보여지는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인도의 화폐개혁과 디지털 경제의 성장

Rahul RAJ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16년 11월 8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000루피와 500루피 지폐 사용을 중지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소식이 전해진 후 인도에서는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사용이 금지될 1,000루피와 500루피 지폐가 이미 시중에서 활발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디 총리는 이러한 강경 조치가 검은돈의 흐름을 끊고 불법 행위와 경제 테러에 연루되어 있는 화폐 위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조치는 인도를 디지털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충분한 기반시설과 경제적인 탄력성의 부족으로 인해 인도의 경제는 큰 후폭풍을 겪고 있다. 특히 화폐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고 통용시키는 과정에서 인도 중앙은행 역시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 2016-2017년 경제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GDP 성장 속도는 2015년도의 8%에서 2016년도의 7.1%로, 그리고 2017년 6.7%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1]. 한편 새로운 통화정책의 실시 이후 인도의 전자지갑과 전자결제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 저소득층 금융 지원제도인 ‘포괄적 금융 지원 계획 (PMJDY)’의 실시 이후 2018년 6월까지 3억 1800만 개의 새로운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수 많은 사람들이 은행 업무와 금융거래를 이용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경제와 전자 거래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Paytm와 BHIM UPI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시민들이 손쉽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었고 인도의 거대 텔레콤 회사인 Jio사는 외딴 지역까지 4G 인터넷 서비스를 싼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인도 경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여성들이 자신의 개인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남성 가족 구성원을 통해 은행에 예금하거나 출금하던 기존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 역시 여성과 같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단계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인도 내 전자결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dit Suisse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의 디지털 결제 시장 규모는 향후 5년 안에 1조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주지할 점은 인도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는 현금 유통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직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3]. 이는 모바일 뱅킹이나 전자결제가 고속 이동통신 기술이나 블루투스, NFC(Near Field Communication)와 같은 최신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혹은 디지털기기)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모바일 사용자 역시 약 4분의 1만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NFC 인도 정부가 향후 인도를 완전한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출처: [1] Arun. (2018). Demontisation; All cost and little benefit. The Economic Times.
[2] PTI. (2018, February 15). Digital Payments in India to reach \$1 trillion by 2023: Credit Suisse.
[3] Sarkar, H. D. (2018, 10 01). Digital Payments in India : Current Challenges and Growth Prospects.

BARUN ICT 5th Essay Contest 개최 및 수상자 시상

지난 12월 6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제 5회 Barun ICT Essay Contest를 개최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21세기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총 31건의 Essay가 제출되었으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3명의 Best Essay Award 수상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바른ICT연구소의 김범수 소장과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태희 교수, 린다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선정된 3편의 Best Essay는 바른ICT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 🏆 *The Age of Digital Distraction: Implications for Classroom Teaching* - 최지우 경제학과
- 🏆 *Stop Uploading Your Loneliness* - 문현돈 신학과
- 🏆 *What is Human Value in Our Brave New World?* - 이지민 철학과

2018 ICIS & KrAIS Workshop 참석



작년 12월 13일부터 약 4일에 걸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2018 IC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에 구윤모 연구교수와 박재영 박사과정이 참가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ICIS는 정보시스템(IS: Information Systems) 분야의 세계적인 컨퍼런스 중 하나로 유관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Bridging the Internet of People, Data, and Things’를 주제로 한 이번 ICIS에서는 미국 도요타자동차의 CDO(Chief Digital Officer)인 Zack Hicks의 기조강연과 함께 다양한 Pre/Post SIG(Special Interest Group) 미팅 및 워크숍과 함께 엄격한 리뷰 프로세스를 거친 24개 Track에서의 연구발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바른ICT연구소 구윤모 연구교수는 본 행사는 물론 사전행사로 진행된 IT Outsourcing 관련 워크숍인 ‘SIG on Advances in Sourcing’과 사후행사로 열린 정보시스템 분야의 국내외 한국학자들의 모임인 ‘2018 Post-ICIS KrAIS Research Workshop’에 참석함으로써 유관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 * 본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Publisher 김범수 | Editor-in-Chief 구윤모, 김보라 | Editor 장윤희 | Designer 이예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02-2123-6694 | www.barunict.kr

